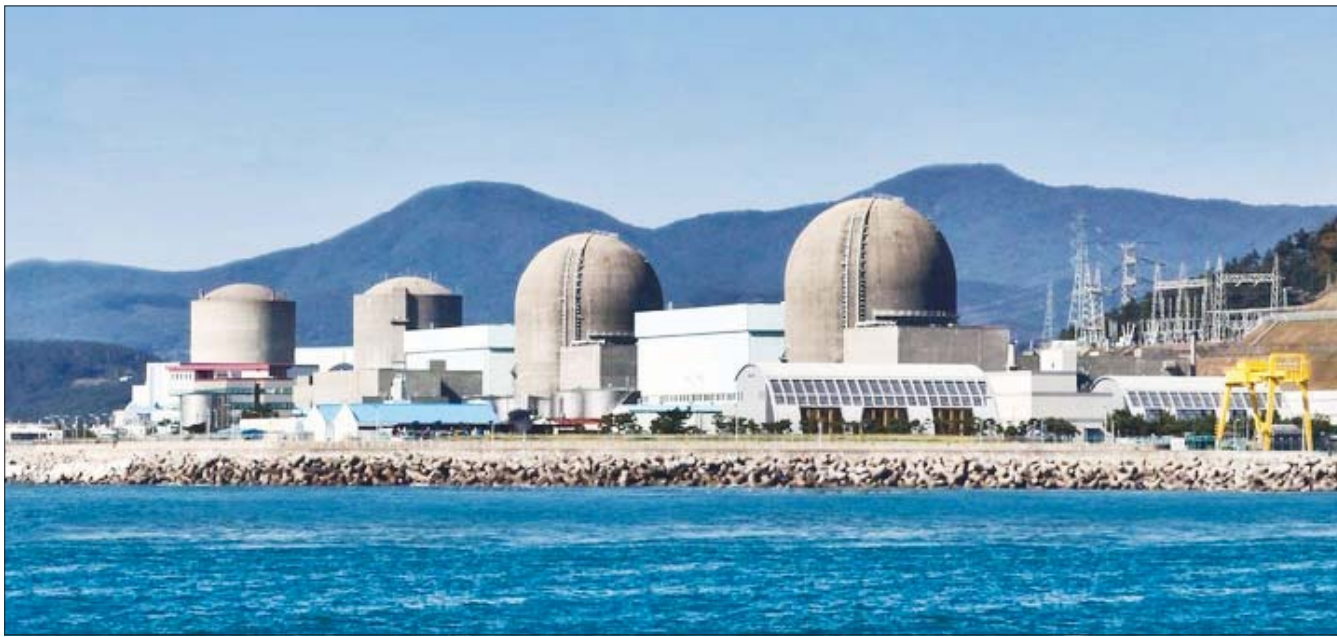


AI전력 폭증 속, 원전 정책 오락가락… 산업 경쟁력 ‘위태’

전기본 재검토에 신규원전 불확실 정책 혼선 속 대형원전 ‘멈춤’ 우려
SMR 투자정책 흔들리면 전망 암울
“일관된 지원없인 기술·수출 흔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모호한 정책 기조가 이어져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을 단기 유행이 아닌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원자로(SMR)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민 공문을 수렴해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기존 계획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0일 기자회견에서 ‘SMR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즉각적인 전력 공급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모호한 기조로 원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계는 장기적 관점의 명확한 정책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이에 따라 제11차 전기본의 대대적 수정과 2026~2040년 계획을 담은 제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해 마련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식 논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논의에서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그만큼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전 산업은 하루 아침에 공급망을 복구하거나 설비를 확

충하기 어려워 정책 지연 자체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계가 가장 큰 우려로 꼽는 것은 대형 원전의 불투명성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대형 원전이지만 정부가 추진과 재검토를 오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실정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에서 이미 나타난 공급망 붕괴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정책 변화와 안

전 규제 강화, 시장 환경 악화가 겹치며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돼 공급망이 크게 악화된 사례가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 서머(V.C. Summer) 2·3호기가 주정부 요금 승인 중단과 공사비 폭증 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프랑스 플라망빌(Flamanville) 3호기 역시 후쿠시마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설계 재검증으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미국과 유럽은 이 같은 정책·규제 부담 속에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추면서 공급망이 무너졌고 현재는 웨스팅하우스처럼 설계 기술만 보유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신규 건설이 중단된 채 해외 수출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3·4호기처럼 모델 플랜트가 있어야 해외 발주처가 동일 설계를 주문할 수 있는데 국내 건설이 멈추면 수출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MR 투자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향후 전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완성되기 전 막대한 자금을 선제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정부 정책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실을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병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기술 개발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SMR은 이미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분야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일관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특검리스크·수출기회 교차… KAI 차기 사장 ‘생존형’ 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

3개월째 대행체제, 협상 신뢰 한계
KF-21·FA-50, 현안 산적한 과제
ADEX 공백 현실화, 망신 우려 고조
정부·노조 공통 요구, 생존형 리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창립 이후 최장기간 수장 공백 상황을 겪으면서 리더십 부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수출 기회가 높은 상황에서 KAI의 차기 사장 인선은 단순한 경영역량 보강이 아닌 KAI의 전략적 좌표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강구영 전 사장의 조기 사퇴로 KAI 수장의 자리가 3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차재병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행 체제는 현안 대응과 국제 협상에서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KAI 본사 전경.

/KAI

현재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는 내부 출신 1명과 관료 출신 1명으로 압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류광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등이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최근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 사장 인선은 신임방사청장과 최대주인 수출입은행장 임명이 마무리된 뒤에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AI 차기 사장 자리는 특검 수사라는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출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관리할 ‘생존형’ 리더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KF-21 전투기 양산, FA-50 수출, 수리온 헬기, 유지·보수(MRO) 사업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협력사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와 치열한 수주싸움을 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요구된다.

KAI는 올해 2분기 매출 828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52억원으로 14.7% 늘었다. 주주잔고도 26조6733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장부상으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

으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계약이 실질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

해외 고객사들은 계약 조건 협상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로는 신뢰를 주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음 달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도 수장 부재상황에서 참석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3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방산기업 CEO들이 참여하는 국제 무대에서, KAI가 직무대행 체제로 참가할 경우 최종 책임과 결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ADEX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대규모 수출 계약과 장기 협력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이기에 리더십 부재는 곧 사업 기회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최근 차기 사장 요건으로 ▲내부 출신 경력자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특검 수사와 무관한 인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KAI 창립 이래 최장의 수장 공백기로 ADEX를 코앞에 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인사로 조속히 공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사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생존형 리더’여야 한다”며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내 동력이 약화되고 해외 협상에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의 방산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KAI의 전략적 좌표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미국발 금융리스크, 달러 지배 강화… 국내 소비·투자 위축

한은, 금융리스크 충격경로 집중 분석
달러 강세 직격탄… 수출 경쟁력 약화
세계국채지수 편입·원화 국제화 해법

미국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의 안전자산 기능이 떨어지면서 국내의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BOK경제연구: 달

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손민규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이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리스크 충격이 ▲국제금융경로와 ▲무역결제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손 과장은 미국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의 지배력이 떨어져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위험 회피성향이 강화되면 자금은 주로 미국의 국채에 몰리는데, 이 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이 경우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금리가 오르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달러화 강세는 우리제품의 수입입국 현지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수출은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되는데 예컨대 1개의 바나나를 수출할 경우 환율이 1달러당 1600원이었던 원화가 1900원으로 올라도 달러화로 거래돼 가격 경쟁력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수출이 원화로 거래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수출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저립해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날 손 과장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해 국채 투자 매력도가 제고

될 경우 국제금융경로와 무역결제경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과장은 “장기적으로 원화를 아시아 역내 국제화 등으로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무역결제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로 인한 달러화의 글로벌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